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8

2024/3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화·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규범연구실(051-797-4342)

Contents

국제기구

세계식량기구(FAO) 2

FAO 제37차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개최

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안보 전략적 예측

세계무역기구(WTO) 11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개최와 합의

지역별 동향

아시아 15

중국 바이든, 해양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 발동...中 크레인 단속 강화

2024년 중국 양회, 해양경제 발전·해양강국 건설 강조

2023년 중국 해상민병 남중국해 출현 전년대비 35% 증가

일본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및 정보보안 입법례

중동 29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차질 장기화...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세계 해운 교란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342)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식량기구

FAO

전문연구원 황수연

FAO 제37차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개최

제37차 FAO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APFIC)가 지난 1월과 2월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고위 임원 회의(SOM)를, 2024년 2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대면 각료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이하 APFIC) 15개 회원국¹⁾ 대표 43명과 비회원국 라오스 대표 1명 및 '아시아 태평양 양식센터 네트워크(이하 NACA)' 등 4개의 정부간 지역수산기구 대표가 옵서버로 참여하였다.

그림 1. FAO 제37차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각료회의



사진 출처: FAO 홈페이지

제37차 APFIC 회의에서 위원회(the Commission)는 제36차 회의(2021년 5월) 이후 FAO 지역사무소의 주요 활동과 제78차 APFIC 집행위원회(the APFIC Executive Committee) 회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FAO 정규 사업 자금 사용 제한으로 인해 APFIC 지역 기술 워크숍 등 기술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했다.

1) APFIC 회원국 총 21개국 중 현장 참석 회원국(5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 온라인 참석 회원국(10개국):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 미참석(6개국): 프랑스, 일본, 미얀마, 파키스탄, 영국, 미국



세계식량기구 FAO

한편, 위원회는 APFIC 지역사무소의 지난 75년간 회원국에 기술 지원, 어업 및 양식업 역량 강화, 지역협력 촉진 활동을 치하하면서도, 향후 5년간 위원회 활동을 중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위원회의 활동 중지 결정은 APFIC의 미래에 관한 특별 실무 그룹(이하 특별실무그룹)의 조사 결과인 APFIC 일시 중지 권장 사항과 FAO 워크숍 '지역 자원 현황 및 지역 평가를 위한 역량 구축 결과에 대한 이해 향상', FAO-NACA의 고위급 회의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혁신 및 투자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미 제36차 APFIC에서 위원회 운영 재정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APFIC의 미래에 관한 특별실무그룹' 설립을 권고했다. 제37차 APFIC 회의에서 특별실무그룹이 수행한 「제1차 특별회의보고서(2021.8.18.~19, 온라인) 및 제2차 특별회의보고서(2022.2.24.~25, 온라인)」(이하 특별실무그룹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특별실무그룹 보고서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산 기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APFIC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APFIC 회원국 및 유관 단체의 의견이 담겨있다.

APFIC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 논의

APFIC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회원국의 주요 의견은 APFIC의 기능이 기존 지역수산기구(RFB) 및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와 중복되고, 기존 지역단체가 APFIC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기능의 일시적 중지 필요로 요약할 수 있다.

APFIC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회원국 및 유관기관 의견조사 결과:

- ① 각 단체의 임무와 역량을 고려할 때 APFIC의 지리적, 기술적, 영역적 기능 범위는 기존 지역수산기구(이하, RFB)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 기능과 유사하다.
- ② APFIC의 정책 의사결정과정은 기존 RFB 및 RFMO 거버넌스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명확한 부가적 기능 없다.
- ③ APFIC, RFB 및 RFMO의 활동은 FAO 또는 기타 매커니즘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④ APFIC는 FAO 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 ⑤ APFIC 회원국이 위원회에 재정 기여 시 기타 RFB 및 RFMO에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한다. 그 외에도 APFIC의 문제점으로 회원국의 재정지원 및 참여 의지 부족, APFIC 진행 사업을 FAO가 실행하거나 관리함, 사무국 전임 직원의 부재(파트타임 근무), 안정적인 재원조달처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세계식량기구

FAO

표 1. FAO와 APFIC의 기능 및 활동 중복 영역

구분	세계식량기구(FAO)	FAO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사업개발/실행	어업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주도 및 실행	전용 예산이 없어 자체사업 개발하지 않음, APFIC 사무국 직원이 FAO 사업에 참여하여 APFIC 활동과 조화되는 의견 제출 가능
어업 및 양식업 통계	FAO 본부의 NFI 통계그룹에서 수집	APFIC는 회원국으로부터 통계 수집 및 분석활동 하지 않음 (APFIC 지역분석 활동은 FAO 데이터를 활용함)
지역 자원량 상태 조사 및 분석	FAO 본부 NFI가 지역 전반에 대한 자원량 상태와 분석을 수행함 (소지역 메커니즘 부재)	APFIC는 회원국 자원평가 정보 수집하지 않음 (APFIC는 자원량 데이터 및 분석 정보 가장 부족한 지역임, APFIC의 자원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소지역 프로그램 촉진에 기여 가능함)
가이드라인 개발	FAO, COFI 및 산하 소위원회는 FAO 글로벌 지침 개발에 기여함 (RFB는 전문가회의에 기술적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작성의 보조 역할에 그침)	APFIC는 지역수준의 지침은 개발 가능하지만 글로벌 지침 개발은 COFI의 승인 하에 FAO 주도 진행
글로벌 및 지역 하위 부문 분석	FAO의 GLOBEFISH, 세계 수산 양식 현황(SOFIA), 기타 지역 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분석 수행하고 정보제공함	APFIC는 자체적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나, 타 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함

표 출처: FAO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APFIC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 선택(안): 위원회는 회의에서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위원회 활동 지속(1안), 위원회 활동 중단(2안), 위원회 협정 종료(3안)를 검토하였다. 회원국들은 지역 협의체 운영에 재정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APFIC의 재정적 한계점 극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위원회 활동 지속(1안)을 위해 현재 APFIC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인 FAO 사업예산 활용 확대 외에 FAO 신탁 기금 확보, 위원회 자율 예산 제도²⁾, 평가에 기반한 회원국에 기부금 할당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원국은 APFIC의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기부금 할당 방식은 만장일치로 반대하였으며 FAO 신탁기금을 활용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온라인 위원회 활동을 통한 비용절감

2) FAO 헌장 제14조 근거 설립기관 중 자율 예산 제도를 갖춘 기관은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와 지중해 총수산물위원회(GFCM)임



세계식량기구 FAO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원회 활동을 중지하는 2안을 따를 경우에는 위원회 정규 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지역협의 포럼, 기술 워크숍 및 출판 활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중지 시 FAO 및 APFIC 사무국은 회원국에 대한 FAO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APFIC 협정 '회원국 5개국 미만일 경우 협정 종료' 조문에 근거하여 회원국 탈퇴를 통한 협정 종료(3안)³⁾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APFIC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활동하지 않는 회원국의 탈퇴를 통한 협정 종료를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현재 APFIC 위원회에서 사실상 탈퇴한 6개국과 종종 위원회 정족수(회원국 2/3)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FAO의 APFIC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 감소 등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기간 활동을 중지하지만 활동 중지가 FAO와 APFIC의 지역수산협력 강화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APFIC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 개발을 위한 지역협력이 식량안보, 생계, 수출,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임에 공감하였다. 또한 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사회 및 형평성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양식 분야 혁신, 효과적인 계획 조치 및 투자에 대한 역량 개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적 시사점

APFIC에 다수의 인도양·태평양 수역 내 주요 어업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역할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FAO 특별실무그룹 보고서가 지적한 기존 지역수산기구와 기능 중복 문제 이외에도 직접적인 어업 관리조치를 수립하여 회원국에 시행을 요구하는 '관리기구' 형태가 아닌 권고적 성격의 '자문기구'인 점도 있다. 한편, FAO 50여 개 지역수산기구 중 30개가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지역수산기구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PFIC의 기능 강화를 위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RFB와 RFMO의 기능과 구체적인 관리조치수단 등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적 기능을 잘하는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 간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FAO 헌장 제6조에 근거 설립된 지역수산기구(RFB)인 IOFC6(인도양어업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를 폐지한 선례 있음(FAO Council Resolution 1/116 to Abolish the Indian Ocean Fishery Commission)



세계식량기구

FAO

도출이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 자료는 주요 원양어업국⁴⁾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이행하고,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조치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1] FAO, 「Report of the thirty-seventh Session of the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APRC/24/INF/12) [2] FAO,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APFIC),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APFIC Virtual meeting, 18-19 August 2021 and Report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APFIC Virtual meeting, 24-25 February 2022」,(2022)

4) FAO 기준 50여개 지역관리기구 중 가입 기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일본(19개), 한국(18개), 프랑스(17개), EU(15개)순임



세계식량기구

FAO

전문연구원 황수연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 전략적 예측 (Strategic Regional Foresight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식량 안보 문제가 사회적 불안과 분쟁으로 이어질까 우려

CIVID-19 이후 경제 침체,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불평 등 증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위기는 국가 전략의 단기적인 효율성과 장기적인 탄력성을 절충하게 한다. 국가가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리쇼어링 전략을 실행하면 이는 무역과 투자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외부 의존도 낮추기 전략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화에 힘입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해 온 모델을 재고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주요 식품 수입국의 경우 식품 및 생산 요소를 포함한 상품의 상대적인 국내가격 변동 폭 확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대외 부채 상환 비용, 식품 농업 투입재 수입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이하 LMIC)는 특히 부채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글로벌 통화 정책 변화와 금리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2022년 이후 외환 보유고가 크게 감소한 LMIC는 환율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량 안보가 문제로 불거지면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전에 해결된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부채 문제로 인해 LMIC와 고소득 국가(이하 HIC) 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제37차 FAO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APFIC)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이하 FAO RAP)⁵⁾가 수행한 ‘지역 식량 시스템의 동인 우선순위 분석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식량 시스템 동인은 식량 생산·가공·저장·판매·소비 등 농식품 시스템 핵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시스템의 활동과 유발요인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하위 지역별 식량 시스템의 동인 우선순위 및 유발요인을 식별하여 지역 식량 안보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5) ‘식량과 농업의 미래-변혁을 위한 동인 및 유발 요인(FOFA+DTT) 분석’은 FAO가 회원국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시나리오 예측 지원을 위해 개발한 모델링 분석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FAO RAP)는 FAO 지원을 받아 ‘농식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지역 예측 훈련(RFE)’에 참여함



세계식량기구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지역별 식량 시스템의 동인 우선순위 분석

아래 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지역별 식량 시스템의 동인 우선순위 분석 결과>와 같이 경제성장/거시경제 전망(2), 국가 간 상호의존성(3), 기후 변화(17)는 모든 하위 지역의 공통 식량시스템 동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지속가능 해양경제(18),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갈등증가(5), 식량가격(9)’이 주요 동인이다. 중국·인도는 ‘인구역학과 도시화(1), 식품소비패턴(14)’이 주요 동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소지역적 주요 동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고소득 국가, 중국·인도와 같이 국가 규모가 크고 경제발전을 이룬 경우 식량 가격(9), 지정학적 불안정 및 갈등증가(5), 천연 자원의 부족 및 고갈(15)이 주요 동인인 반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같이 저개발국가인 경우 빈곤(7), 불평등(8), 농식품 시스템 공공 투자(11)가 주요 동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지역별 식량 시스템의 동인 우선순위 분석결과

구분	고소득 국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북한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태평양 도서국
사회· 경제적 시스템	1. 인구역학과 도시화		0	0	0
	2. 경제성장/거시경제 전망	0	0	0	0
	3. 국가 간 상호의존성	0	0	0	0
	4. 빅데이터 생성, 제어, 사용 및 소유권한	0		0	
	5. 지정학적 불안정과 갈등증가	0	0		0
	6. 불확실성			0	
	7. 빈곤		0	0	0
	8. 불평등		0	0	0
농 식품 시스템	9. 식량가격	0	0	0	0
	10. 혁신과 과학	0		0	
	11. 농식품 시스템 공공투자		0	0	0
	12. 생산의 자본과 정보 집약도				
	13. 투입 및 산출물 시장 집중				
환경적 시스템	14. 식품 소비 패턴		0	0	0
	15. 천연자원 부족 및 고갈	0	0	0	0
	16. 생태계의 전염병과 파괴			0	
	17. 기후변화	0	0	0	0
	18.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0			0

표 출처: FAO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소규모 국가 간에도 공공투자의 차이가 중요한 구조적 차이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한다. 특히, 태평양도서국과 같이 ‘농식품 시스템 공공투자’가 주요 동인인 지역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세계식량기구 FAO

혁신적인 생산 접근 방식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1인당 소득, 투자 잠재력 차이로 인한 국가 간 농업 자본 집약도 차이는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동인 간 상충관계로 인해 식량 시스템 변화 및 해결방안 도출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자원 부족 및 고갈(15)과 경제성장(2)과 같이 '세대 간 형평'과 '새로운 균형점 찾기'를 강조했다. 또한 보다 지속 가능한 식량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고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채택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의 역할에 주목했다.

특히 일부 중소득 국가의 경우 과거 고소득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채택했던 지속 불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을 채택한다면, 향후 천연자원 고갈 가속화 및 자원 분쟁이 더욱 심화 될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자원 고갈 등 앞으로 다가올 초국가적 성격의 도전과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광범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지역별 식량 시스템의 동인 우선순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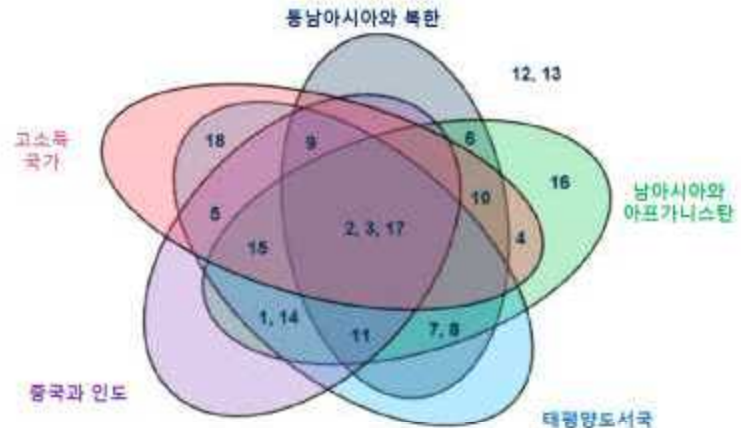


그림 출처: FAO

- | | |
|---------------------------|--------------------|
| 1. 인구역학과 도시화 | 10. 혁신과 과학 |
| 2. 경제성장/거시경제 전망 | 11. 농식품 시스템 공공투자 |
| 3. 국가 간 상호의존성 | 12. 생산의 자본과 정보 집약도 |
| 4. 빅데이터 생성, 제어, 사용 및 소유권한 | 13. 투입 및 산출물 시장 집중 |
| 5. 지정학적 불안정과 갈등증가 | 14. 식품 소비 패턴 |
| 6. 불확실성 | 15. 천연자원 부족 및 고갈 |
| 7. 농촌 및 도시 빈곤 | 16. 생태계의 전염병과 파괴 |
| 8. 불평등 | 17. 기후변화 |
| 9. 식량가격 | 18.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2021년 식량자급률 44.4%)는 이미 중장기 식량안보강화 방안(2022.12, 농림축산식품부)을 발표하고 식량 주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식량안보 전략에는 공공비축 확대, 민간부문



세계식량기구 FAO

해외 식량 유통망 확보 지원,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정책 등이 있다. 그 외 지역 내 식량 안보를 위한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⁶⁾' 대상 작물 범위 확대 협의,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지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 강화 등 정책 추진 중이다.

정책적 시사점

원자재 무역 증대, 기후변화, 계절적 노동 이동 협정 등 지역 내 및 지역 간 이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증가해 왔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식량 무기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시스템 동인 우선순위 유사국 간 공동 대응 협력, 동인 상충관계 국가 간 균형점 찾기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해양경제(18)'가 주요 동인인 고소득 국가와 태평양도서국은 공동의 재생에너지, 관광, 어업, 해운, 해양폐기물 관리 등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농식품 시스템 공공투자(11)가 동인 상충관계인 고소득 국가는 저개발 지역에 식량 생산·가공·저장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공기술 및 시설, 판매처 확보 지원 등 공공투자 협력 사업 확대로 식량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

출처 : [1] FAO,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지역 예측」, (APRC/24/INF/17)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22일,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6)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는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간 식량 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



세계무역기구

WTO

전문연구원 황수연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개최와 합의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개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이하 MC13)가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2차 회의에서 합의한 WTO의 효율성, 효과성 및 회원국의 WTO 업무 참여 촉진을 위한 WTO 이사회, 위원회 및 협상그룹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최종 채택된 '아부다비 각료선언'에는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WTO 가입, 분쟁해결제도 개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TBT) 이행에 대한 개발도상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LDC)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등 2개국 총 7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그림 3. WTO 제13차 각료회의 폐막식



사진 출처: WTO 홈페이지

수산보조금 협정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논의되었는데, 그 중 2개 부문인 'IUU 어업 관련 보조금 금지 규율'과 '과잉 어획된 어족자원에 대한 규율'은 제12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2)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후속 협상으로 남겨둔 '과잉생산능력 및 남획(OCOF)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및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이번 MC13에서 논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 WTO

특히 수산보조금 협정 제6조7)를 구체화하기 위한 MC13 ‘수산보조금 협정 추가 조항의 초안’ 의제(이하 추가조항 초안)의 제B조(특별 및 차별 대우)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 조항은 WTO 협정의 ‘특별 및 차별 대우’ 조항과 국제법의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의 원칙을 ‘보조금 2단계 구조’로 구현한 것으로 MC12에서 회원국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채택되었지만 구분 기준을 합의하지 못해 후속협상으로 남겨둔 것이다.

MC13 수산보조금 협정 추가 조항 협상 결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C13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전해진다. MC13 개최 전 인도 정부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가난한 어민에 대한 보조금 억제에 반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어업 보조금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3. WTO MC13 의제 ‘수산보조금 협정 추가 조항의 초안’ 주요 내용

회원국 구분			제A.1조(과잉생산 및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 부과 가능 여부
최빈개발도상국(LDC)			보조금 부여 가능 *B.1조 참조
개발도상국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회원국	LDC 졸업국	최대 [x]년(미확정) 동안 보조금 부여 가능 *B.1조 참조
		해면어업 점유율 최대 [0.8(미합의)]% 미초과 회원국	- WTO 사무국이 배포한 최근 3년간 연간 세계 해면 어업 생산량 (FAO 통계) 점유율이 [0.8](미확정) 미만일 경우 보조금 부여 가능 *B.2조 참조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국		해당 어종에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보조금 부여 가능 *A.1.1(a)조 참조
			자국 EEZ 내 및 지역 RFMO/A의 권한 하에 있는 어종에 대해 회원국이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보조금 부여 가능 *B.3(a)조 참조
			회원국이 소규모 및 영세 어업(저소득, 자원 부족 및 생계를 위한 어업)으로 규정한 어업인이 회원국 관할권 내-기선으로부터 최대 [12], [200](미확정) 해리까지-에서 어업활동 하는 경우 보조금 부여 가능 *B.4(a)조 참조
연간 수산보조금 총액 상위 10개국			보조금 지급 불가 *A1.1(b)조 참조

표 출처: WTO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7) 수산보조금 협정 제6조(최빈개발도상국 회원을 위한 특별규정) 회원국은 최빈개발도상국 회원국이 관련된 사안들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하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할 때 관련된 최빈개발도상국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세계무역기구

WTO

인도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어업인을 비교해서는 안 되며, 선진국 중 한 국가의 어업보조금은 어업인 1인당 8만 달러를 초과하는 반면에 인도 어업인 1인당 어업보조금은 약 38달러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MC13 개최 전 인도 정부 관계자의 설명과 같이 WTO MC13에서 인도 정부대표단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약 900만 명의 영세 어업인을 위한 보조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도 정부대표단은 또한 국가 간 기술 차이를 고려하여 선진국의 원양어업에 향후 25년 간 모든 종류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였다. 이는 인도의 자국 관할수역 내 영세어업인 보호와 상업 어업 육성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수산보조금 지급 3위 국가로 알려져 있어 수산보조금 협정 추가 조항 채택 시 과잉생산 및 남획을 초래할 수 있는 보조금⁸⁾을 부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표 4. WTO에 통지한 대한민국 2021년-2022년 수산보조금 사업 내역

보조금 명칭	보조금 정책 목적	지원 근거 법령	보조금 형태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법
2.1 어업관리 지원	높은 관리 비용 등 어민의 사업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함	수산업법 (제93조)	대출 이자 보조 (대출이자율과 시장이자율 격차 보조)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허가증을 보유한 어업 종사자 -자율관리어업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 및 영세 어민에 우선권 부여
2.2 해외어업 관리지원	어업 시설 유지 관리, 보험 비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며 사업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원양산업 발전법 (제26조)	대출 이자 보조 (대출이자율과 시장이자율 격차 보조)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적격 원양어업 종사자 -연안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신청 불가
2.3 수산자원 관리지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어장 환경 개선, 자원 관리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함	수산자원 관리법 (제36조, 제41조 등), 수산업법 (제93조)	보조금 및 대출	-국립수산과학원(NIFS) 등 국가기관, 자원관리를 위한 민간단체(TAC, 자율관리어업 등) 소속 어업인 및 어촌계
2.4 양식어업 발전지원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양식업 개발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함	양식산업 발전법 (제66조)	보조금 및 대출	-양식어업 종사자 -보조금 조건: 사업비의 20~30% -대출조건: 연 3% 금리로 2년 대출
2.5 선박 해체 지원	근해 및 연안 어선 감축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목적으로 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6.2조)	지원금	-연안 및 근해 어업 종사자 -지원 조건: 해상어선 해체 (정부지원 100%), 연안어선 해체 (정부지원 80%, 도비지원 20%)

표 출처:
WTO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8) 추가조항 초안 제A.1조: 어떠한 회원국도 과잉생산 및 남획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부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과잉생산 및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선박 건조 취득·유지관리·현대화 개조를 위한 보조금, (b) 선박용 기계 및 장비(어업 장비 및 엔진, 어류 가공 기계, 어류 탐지 기술, 냉장고 또는 어류 분류 또는 세척 기계 포함)의 구매 또는 유지 관리에 대한 보조금, (c) 연료, 얼음, 미끼 구입 비용에 대한 보조금, (d) 인건비, 사회부담금 또는 보험에 대한 보조금, (e) 선박, 어업인, 고용자 소득 지원(금어기 동안 어업인 생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 (f) 어획물 가격 지원, (g) 해상 지원 보조금, (h)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 선박 운영에 대한 손실 보전



세계무역기구 WTO

2023년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통제한 수산보조금 사업에는 ‘어업 관리지원, 해외어업관리지원, 수산자원관리지원, 양식어업 발전지원, 선박 해체지원’ 사업이 있다. 위 표 <WTO에 통제한 대한민국 2021년-2022년 수산보조금 사업 내역> 중 ‘2.1 어업관리지원 보조금’은 추가조항 초안 제A.1조 (h)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 손실 보전, ‘2.2 해외어업관리 보조금’은 (b) 선박용 기계 및 장비 구매·유지 관리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나라가 수산보조금 금액을 줄여 세계 수산보조금 지급 상위 10위에서 벗어난다 해도 우리나라 해면어업 생산량이 세계 총 해면어업 생산량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2010-2021년) 1.7%인 것과 우리나라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 선언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조항의 초안에서 규정한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제공하는 보조금 부여 가능 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수산보조금 후속협상이 계속될 차기 WTO 제14차 각료회의(2026년 예정) 개최까지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정책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협약 발효를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 WTO, MC13 결과, 아부다비 장관 선언(WT/MIN(24)/DEC) [2] WTO, MC13 2024년 2월 16일 아부다비패키지 초안 중 어업 보조금(WT/MIN(24)/W/10) [3] REUTERS, 2024년 1월 25일, 인도 WTO 회의에서 영세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철폐 반대 [4] THE HINDU NEWS, 2024년 3월 2일,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WTO MC13은 어업, 농업에 대한 협상 없이 종료, <https://www.thehindu.com/business/despise-hectic-discussions-wto-mc13-ends-with-no-deals-on-fisheries-agriculture/article67905553.ece>(검색일: 2024.2.27.) [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5조에 따른 통지(G/SCM/N/401/KOR)

9) FAO FISHSTATJ, 세계 해면어업 생산량(2023.3.31. 업데이트) 데이터 활용하여 산출함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바이든, 해양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 발동...中 크레인 단속 강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해양 사이버 보안과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매년 5조 4,000억 달러의 경제활동과 3,100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95%를 처리하는 미국 항만의 해양운송시스템(MTS)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MTS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이 행정명령의 골자다. 미국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선 21일 “21세기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라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창설된 부처다.

그림 3. 미국 항구에 설치된 중국산 크레인



그림 출처: CNN(2024.3.8.)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행정명령이 그동안 미국 내에서 사이버 위협으로 우려됐던 중국산 크레인에 대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에서 제조된 크레인은 앞으로 정보와 운영 기술과 관련한 미국의 새로운 규범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에 따르면, 중국산 크레인은 현재 미국 내 항만에서 사용되는 전체 크레인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산

아시아 중국

크레인에 장착된 정보 수집 장치는 미국 항만 내 컨테이너의 출처와 목적지 등 정보를 추적해 물류 공급망 교란이나 사이버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점차 퇴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 자국 산업 역량 재건

일본 미쓰이E&S의 미국 자회사인 PACECO가 미국에서 크레인 제조를 재개할 계획인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백악관은 21일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항만 크레인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산업 역량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쓰이E&S는 198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 크레인을 생산했다가 이후 중단했는데,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30년 만에 다시 미국 내에서 항구 크레인 제조 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미쓰이E&S 측은 곧 미국의 협력사를 선택하고 생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4. 미국 항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산 크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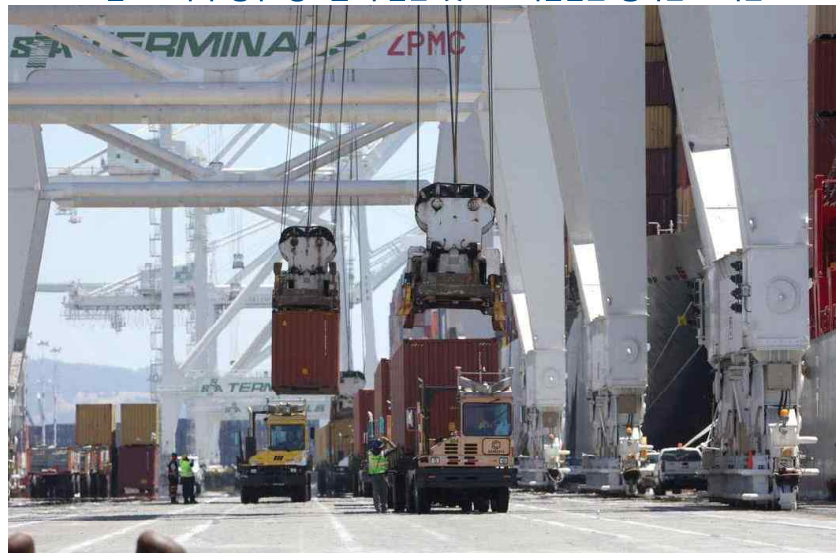


그림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2024.2.21.)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해양경비대(Coast Guard)는 선박, 항구, 항만 등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의심되는 선박의 이동을 통제하고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항만 인프라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중국

사이버 보안 능력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의심되는 선박의 이동을 통제하고, 항만 안전과 보안 위협을 시정하도록 해당 시설에 요구하거나 해당 사이버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들어간 선박 및 해안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중국은 자유시장 질서에 맞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하려는 시도가 미국 경제에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워싱턴 DC 주재 중국대사관의 류펑위(劉鵬宇)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국력을 남용해 중국과 미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항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해양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과 함께 경제와 정치를 분리했던 과거 자유주의 질서가 점차 악화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동맹국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 [1] 중앙일보(2024.2.21.), “中 크레인 은 트로이 목마”…바이든, 행정명령으로 퇴출 수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217#home>(검색일: 2024.3.11.) [2] CNN(2024.3.8.), Congressional probe finds communications gear in Chinese cranes, raising spying concerns, <https://edition.cnn.com/2024/03/07/politics/congressional-probe-communications-gear-chinese-cranes/index.html>(검색일: 2024.3.19.) [3] Maritime Logistics Professional(2024.2.21.), Biden Executive Order Targets Cybersecurity at US Ports, <https://www.maritimeprofessional.com/news/biden-executive-order-targets-cybersecurity-391648>(검색일: 2024.3.13.) [4] The White House(2024.2.21.),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Initiative to Bolster Cyber security of U.S. Port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2/21/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initiative-to-bolster-cybersecurity-of-u-s-ports/>(검색일: 2024.3.17.) [5] The Wall Street Journal(2024.2.21.), U.S. to Invest Billions to Replace China-Made Cranes at Nation's Ports, <https://www.wsj.com/politics/national-security/u-s-to-invest-billions-to-replace-china-made-cranes-at-nations-ports-d451ef8f>(검색일: 2024.3.3.)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2024년 중국 양회, 해양경제 발전·해양강국 건설 강조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가운데 해양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제 발전과 해양강국 건설 목표가 강조되었다. 중국의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를 통칭하는 말로, 매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경제, 사회 정책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그해 주요 정책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 예산 및 경제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정협은 중국공산당, 국무원, 전국인대의 정책을 자문 및 심의한다.

그림 5. 2024년 중국 양회



그림 출처: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4.3.11.)

이번 양회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했으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정책 추진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추진하는 발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중국은 앞으로 노동과 자본을 양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 과학기술 강국이 되어 첨단기술을 보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보호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2024년 정부보고는 올해 친환경 개발(일명 녹색개발)과 관련한 재정, 세제, 금융, 투자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중국

광둥-홍콩-마카오 잇는 웨강아오대만구(GBA), 미래 경제허브로 특화
해양과 관련한 내용은 2024년 정부보고 중에서 ‘도시와 농촌의 통합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및 경제 배치 최적화’ 부분에 포함되었다. 이 중에는 웨강아오대만구(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와 같은 고품질의 발전 동력원이 제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해양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양강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GBA는 남중국해를 인접하고 있는 광둥성의 9개 도시와 홍콩과 마카오 2개 특별자치구가 포함된 거대한 연안 경제구역으로, 2016~2020년 추진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2019년에는 GBA 발전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이 청사진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을 향후 국제 금융·해운·무역 등 분야에 특화된 경제 허브로, 마카오는 글로벌 관광 및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밖에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는 글로벌 상업과 교통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림 6. 중국 웨강아오대만구(GBA)의 범위



그림 출처: CGTN(2019.2.18.)



아시아 중국

이번 양회에 앞서 지난 1~2월 중국 31개 성(省)에서는 지방 양회가 먼저 개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광둥성 등 연안 지역은 해양경제 발전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공표했다. 특히 광둥성은 “세계적 수준의 GBA 지역 건설과 해양경제 육성”을 올해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은 심해과학기술센터 등 해양 관련 연구기관 설립 계획과 해양공학 및 첨단기술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산둥성, 해양경제 육성 박차...바다목장 ‘블루식량창고’ 건설

한편, 각 지방정부 업무보고 가운데 해양 언급 횟수는 광둥성이 34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이난성이 15번, 랴오닝성이 12번, 산둥성이 9번, 푸젠성과 저장성이 각각 8번, 장수성이 3번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서해를 맞대고 있는 산둥성과 장쑤성이 해양경제·해양환경 관련 정책을 중시하고 있어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산둥성은 2023년 연안 항구 화물 물동량 1위 유지와 대형 심해 양식 장비의 대량 생산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2024년에 산둥성은 생물의학, 국제무역, 해양경제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며, 옌타이시(煙台市) 창다오현(長島縣)에 ‘블루식량창고(藍色糧倉)’라는 이름의 바다목장 성격의 해양경제개발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7. 중국 산둥성 창다오 바다목장, ‘블루식량창고’



그림 출처: CGTN(2019.2.18.)



아시아 중국

그림 8. 중국 산둥성 해역의 바다목장



그림 출처: 人民網(2024.2.2.)

출처 : [1] CGTN(2019.2.18.), China reveals blueprint for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ttps://news.cgtn.com/news/3d3d414e32637a4e32457a6333566d54/index.html>(검색일: 2024.3.20.) [2] 人民網(2024.1.27.), 2024年山东省政府工作报告(全文), <http://sd.people.com.cn/n2/2024/0127/c166192-40729114.html>(검색일: 2024.3.12.) [3] 人民網(2024.2.2.), 探訪“藍色糧倉” 體驗耕海牧漁(人民眼·新春走基層), <http://cpc.people.com.cn/BIG5/n1/2024/0202/c64387-40171620.html>(검색일: 2024.3.27.) [4] 山东省(2023.12.26.), 全国首个, 设在山东! 长岛“蓝色粮仓”经略海洋, https://www.sohu.com/a/747079442_121345914(검색일: 2024.3.19.) [5]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24.3.5.), 最全! 50个动态场景看2024《政府工作报告》全文,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3/content_6936260.htm(검색일: 2024.3.13.) [6] 中国科学院, 2024年全国两会, <https://www.cas.cn/zt/hyzt/2024lh/>(검색일: 2024.3.8.) [7]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4.3.11.), 十四届全国人大二次会议在京闭幕,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3/content_6938898.htm(검색일: 2024.3.16.)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2023년 중국 해상민병 남중국해 출현 전년대비 35% 증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양민병대 선박은 많게는 하루 평균 195척 출현했다. 이는 AMTI가 2021~2022년에 걸쳐 12개월 동안 관찰했던 규모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AMTI는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해상민병이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AMTI가 원격 감지 데이터(remote sensing data)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상민병은 2023년에 특히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미스치프 리프(Mischief Reef)와 세컨드 토마스 쉘(Second Thomas Shoal) 주변 해역에 집중적으로 출현했다. AMTI는 또한 시에라 마드레(BRP Sierra Madre) 함정에 대한 필리핀의 보급 임무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 해경과 고정적으로 협력하는 해상민병 선박도 있다고 전했다.

그림 9. 2023년 중국 해상민병 출현이 급증한 남중국해 암초



그림 출처: CSIS, AMTI(2024.2.28.)

국제법상 간조노출지인 미스치프 리프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지만 1995년부터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이다. 중국은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4~1995년 이 암초에 처음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고, 1999년에 추가로 구조물 공사를 진행했다. 세컨드



아시아 중국

토마스 암초 역시 간조노출지인데 1999년부터 필리핀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필리핀은 베트남전에 투입된 시에라 마드레 함정을 미국으로부터 양도받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 배치하고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이 함정에는 10명 안팎의 필리핀 해병대원들이 주둔하고 있어 필리핀 해경, 어민 등이 보급품을 전달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필리핀이 고의로 미군 함정을 불법 좌초시켰으며, 이를 통해 미국도 남중국해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필리핀 해군의 보급품 전달을 방해하기 위해 중국 해경 함정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는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2023년 하반기에만 해도 8월, 10월, 12월에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그림 10. 미스치프 암초 주변의 중국 해상민병 선박(2023.8.4.)



그림 출처: CSIS, AMTI(2024.2.28.)

해상민병,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수단...상대국 대응 힘들어

해상민병으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은 2015년부터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해역에서 활동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어선들은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인공섬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주변과 대만 주변 해역에서도 중국 해상민병이 무리를 지어 세력을 과시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국 장쑤성에서 온 어선들이 미국 군함을 둘러싸고 비디오를 촬영해 중국 해군에 보고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이 역시



아시아 중국

중국 해상민병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남중국해 티투섬(Thitu Island, 중국명 중예다오) 주변에서도 중국 어선들이 무리를 지어 필리핀 어선과 충돌한 사건 등은 민간 어민을 가장한 중국 해상민병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2월에는 대만 마주(馬祖) 주변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화물선에 의해 해저 케이블이 절단돼 통신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시 어선을 가장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선박이 개입한 사례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한편, AMTI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압초/도서 주변에 해상민병대를 배치한 것은 국제적으로 가시화된 사실이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는지,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전개하는지 등 문제는 원격 탐사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검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상민병 활용은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의 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앤드류 에릭슨(Andrew S. Erickson) 등이 펴낸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에 따르면, 회색지대 활동은 “전쟁과 평화라는 전통적인 이중성 사이에 있는 경쟁적인 상호작용”으로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때문에 상대국으로서는 대응이 어렵다.

출처 : [1] Erickson, Andrew S.·Martinson, Ryan D.(2022),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광대훈 역, 박영사. [2] AMTI(2024.2.28.), WHEREVER THEY MAY ROAM: CHINA'S MILITIA IN 2023, <https://amti.csis.org/wherever-they-may-roam-chinas-militia-in-2023/>(검색일: 2024.3.5.) [3] The Diplomat(2023.4.15.), After Chinese Vessels Cut Matsu Internet Cables, Taiwan Seeks to Improve Its Communications Resilience, <https://thediplomat.com/2023/04/after-chinese-vessels-cut-matsu-internet-cables-taiwan-shows-its-communications-resilience/>(검색: 2024.3.21.) [4] 环球网(2023.11.24.), 代帆：又拿“坐滩”军舰搞事？菲律宾正在过界,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TqWGDilME>(검색일: 2024.3.21.)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황수연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및 정보보안 입법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경제적 자립과 기술적 우위 확보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국가 전략을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하 일본 경제안전보장시책)’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개정

2022년 5월 일본은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 법률」(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한 후에 최근까지 기본 방침 및 지침,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안전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특정 사회 기반 업무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특정 중요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 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창설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특정사회기반 업종 범위¹⁰⁾에 기존 외항화물 항만운송 사업 외에 「항만 운송 사업법」 제3조 제1호¹¹⁾에서 규정하는 ‘일반 항만 운송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서 외항 해상운송사업 외 일본 항만 내 화물 선적, 하역 서비스도 특정사회기반 업종으로 포함하여 해상운송 서비스의 안전 확보 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본 경제안보 정보법안 국회 제출

또한 일본 내각관방은 2024년 정기국회에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중요 경제안보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안보 정보법안)을 제출하였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중요 인프라 및 물자 공급 사슬에 관한 정보, 사이버 위협·대책 등에 관한 정보,

10) 제 50조 특정사회기반 업종: 전기, 가스, 석유(비축·정제·석유가스 수입), 수도, 철도, 화물 자동차 운송, 해상운송(외항화물), 항공, 공항,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보험·금융거래·신탁·자금결제·예금보험·주식 등·전자기록채권), 할부판매

11) 제3조 1호(일반 항만 운송 사업): 화주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 운송된 화물의 수취 또는 화주에게 인도 등 이러한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행위를 일관되게 행하는 행위



아시아 일본

공급망상의 취약성 관련 정보 등을 ‘중요 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하고, 중요 경제안보정보 취급자를 제한하는 조치, 특정비밀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적합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적성평가¹²⁾(보안·클리어런스¹³⁾) 실시 등이다.

그림 11. 비밀정보 제공 흐름과 관리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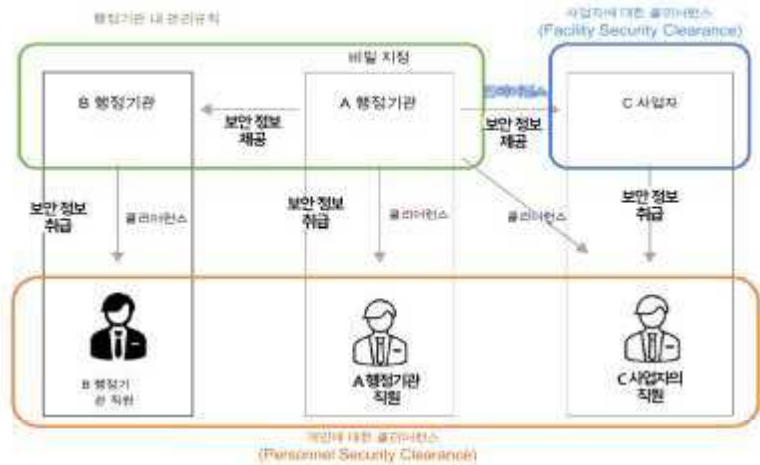


그림 출처: 일본 내관각방
홈페이지

일본의 「경제안보 정보법안」 상 중요 경제안보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성평가는 일본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정부의 안전보장 상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본 사업자는 일본 정부를 통해 해외 적성평가 적합사업자와 중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림 12. 외국 사업자와 보안·클리어런스 및 안보상 중요한 정보의 교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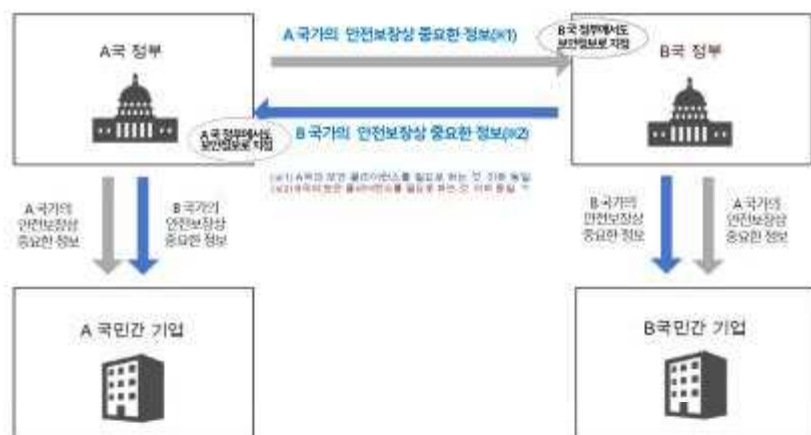


그림 출처: 일본 내관각방
홈페이지

- 12) 적성평가 조사 내용: ① 중요 경제 기반 훼손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② 범죄 및 징계의 경력에 관한 사항, ③ 정보의 취급에 관련된 비위의 경력에 관한 사항, ④ 약물의 남용 및 영향에 관한 사항, ⑤ 정신 질환에 관한 사항, ⑥ 음주에 대해 의 절도에 관한 사항, ⑦ 신용 상태 기타 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 13) 보안클리어런스는 국가의 정보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안보상 중요 정보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정보를 누설한다는 우려가 없다는 신뢰성을 확인한 사람이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제도(일본 「특정 비밀보호법」에서 보안클리어런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아시아 일본

안보의 개념이 방위, 외교 등 전통적인 영역에서 경제,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 클리어런스 제도'를 통해 정보보안 강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 정보보호 강화 제도가 동맹국 간 경제기술 분야의 보안 협력체제 및 글로벌 정보보안 체제 구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사업자는 일본 정부의 정보보호 강화 제도가 외국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저해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민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주분야 등 해외정부 사업 입찰에 '보안·클리어런스 보유'가 참가자격인 예시를 설명하면서, 최근 사이버보안 사고로 인한 외국 정부와 기업의 정보보안수준 강화 요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본도 정부와 민간의 정보보호 노력으로 국가 전체 보안수준 향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관련법을 정비하였다. 소위 '공급망 3법'이라 불리며 경제안보 강화 조치로 공급망 위기 모니터링 및 정보 발령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특별법), 정부기관과 민간에 공급망 현황 조사 및 경제안보품목 정보보호의무 부과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위기대응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구체화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다.

각 법률 제·개정 주요 내용으로 「소부장특별법」(2023년 6월 개정)은 법률 목적과 조문에 '공급망 안정화'를 명시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공급망안정화법」(2023년 12월 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관련 품목의 정보보호의무, 공급망 현황조사 및 비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 이다. 이 법률은 일본 「경제안보 정보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민간기업에 정보보호 의무 부과 및 정보 취급자에 대한 평가, 외국 기업과 정보교환방식 규정 위반 시 벌칙 부과와 같이 민간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자원안보법」(2024년 2월 제정)은 자원안보위기대책본부, 자원안보협의회, 전담기관지정 등 자원안보를 위한 총괄운영 조직의 기능, 구성, 대응훈련 실시 등의 임무 부과를 명시했다.

그 외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안을 위해 최근 「사이버안보



아시아

일본

업무규정」(2024년 3월 일부개정),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2020년 12월 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2023년 12월 제정) 등 정보보호 법령을 정비하였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국가 전체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의 산업 중요 정보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안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1] 대한민국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주요국 입법동향 '일체적 경제사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법률' 2022년 5월 25일 등록,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검색일: 2024.3.20.) [2]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제213회 국회의안,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kaiji213.htm(검색일: 2024.3.20.) [3] 내각문방 홈페이지, 중요 경제안보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https://www.cas.go.jp/jp/houdou/pdf/20240227_siryou.pdf(2024.3.20. 접속) [4] 일본 전자정부법령검색, 항만운송사업법, <https://elaws.e-gov.go.jp/>(2024.3.21. 접속)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 <https://www.law.go.kr/>(검색일: 2024.3.28.)

중동

수에즈 운하

전문연구원 정 현 옥

수에즈 운하 차질 장기화...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세계 해운 교란

글로벌 해운 전문 매체인 Global Maritime Hub에 따르면, 2024년 1~2월 수에즈 운하를 통한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의 수에즈 운하 이용도 크게 줄어 이 2개월 간 통과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5% 감소했다. 반면, 지난 4개월 동안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한 교역량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했다. 2023년 11월 중반부터 시작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유조선, 상선 공격이 실제로 세계 해상교통로 교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지난 11월부터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국가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후티 반군이 공격한 선박은 50척 이상이며, 공격을 받은 선박 중에는 홍해에 가라앉은 비료 화물선과 선원 3명이 사망한 선박도 포함돼 있다.

그림 13. 수에즈 운하 물동량 급감과 희망봉 우회 선박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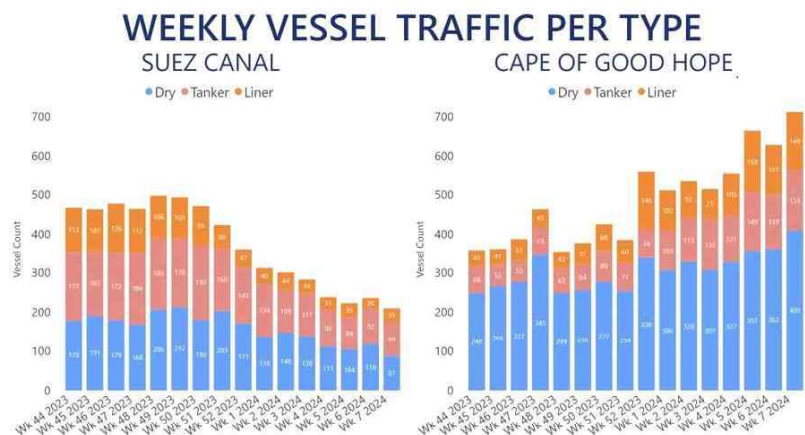


그림 출처: Global Maritime Hub(2024.2.23.)

홍해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선박 증가...10~14일 더 소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인공 해로인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거리로, 세계 주요 무역 경로로 꼽힌다. 1858년 프랑스가 이 운하 공사에 착수했고 1869년 개통되었다. 수에즈 운하는 경제적 가치가 큰



중동

수에즈 운하

만큼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을 거듭해 왔다. 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가 운하 통제를 시도했고, 운하가 통과하는 이집트와 다른 강대국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몇 차례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다. 현재는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수에즈 운하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대하다. 매년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12~15%가 약 193km에 이르는 이 운하를 통과한다. 이 때문에 후티 반군 문제로 빚어진 수에즈 운하의 물동량 급감이 앞으로 더 지속되면 물류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티 반군은 후티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인 이란을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이란과 이란의 우호국 선박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1월 19일 선언했다. 이란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위험이 큰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해운사들은 10~14일이 더 소요돼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고자 다국적 해군의 호위를 기다리는 선박들도 있으나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안전을 확신할 수 없어 아예 홍해 항로를 피하는 선사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의 해운 물류를 항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기업들도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한 육지 운송을 확대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해 해저 케이블까지 공격받을 시 피해 막심해져

미국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위협을 지속할 경우 추가 공습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후티 반군의 배후국인 이란과의 직접적 충돌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또한 홍해 지역의 후티 반군 문제는 2014년에 시작된 예멘의 혼란과 그보다 더 오래된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간 갈등, 미국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 다양한 정치·역사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후티 반군 지도자가 지난 2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삼을 수 있는 고가치 목표인”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면서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다. 알 자지라(Al Jazeera)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17%를 차지하는 16개의 광섬유 케이블이 홍해 해저를 따라 운행된다. 우려는 3월 초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중동

수에즈 운하

후티 반군은 3월 5일 홍해 해저에 있는 케이블 20개 중 4개를 절단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은 통신사업자나 투자자 등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약 1%만이 정부에 일부 또는 전체 속해있다. 민간기업들이 이 같은 테러 공격에 대처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림 14. 홍해 해저 케이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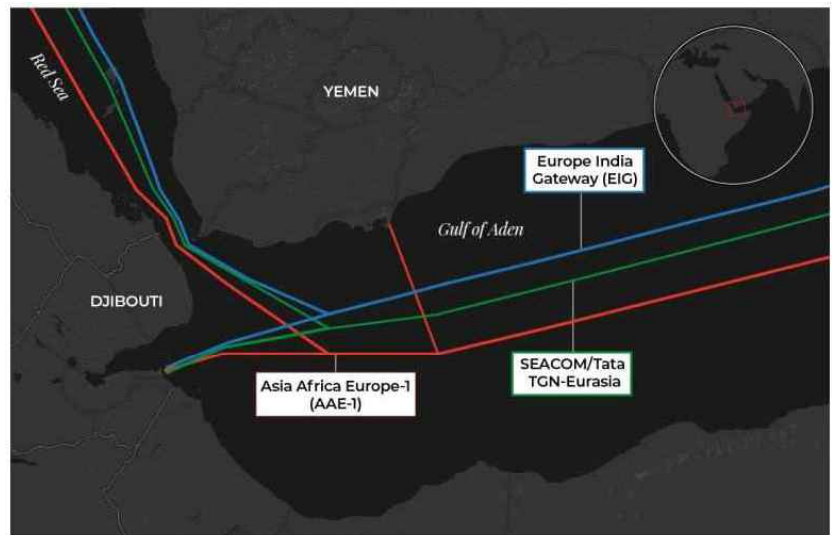


그림 출처: Al Jazeera(2024.3.6.)

한편, 최근 후티 반군의 무차별 민간 선박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이용을 꺼리는 해운회사들이 증가하면서 수에즈 운하가 주요 수입원인 이집트의 국가 경제도 타격을 입었다. 이집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수에즈 제2 운하를 약 10km 확장하고 수심을 제고하여 운하 수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1] 세계일보(2024.3.11.), 사상초유의 수에즈·파나마운하 ‘동시 마비’ 장기화… 글로벌 물류 ‘초비상’,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LGIUYDX> (검색일: 2024.3.12.) [2] Al Jazeera(2024.3.6.), Why are people blaming Yemen’s Houthis for cutting the Red Sea cables?, <https://www.aljazeera.com/news/2024/3/6/why-are-people-blaming-the-houthis-for-cutting-the-red-sea-cables>(검색일: 2024.3.17.) [3] Global Maritime Hub(2024.2.23.), Weekly merchant traffic through the Suez Canal down by 55%, <https://globalmaritimehub.com/weekly-merchant-traffic-through-the-suez-canal-down-by-55.html>(검색일: 2024.3.21.) [4] The Wall Street Journal(2024.3.10.), Two Canals, Two Big Problems—One Global Shipping Mess, <https://www.wsj.com/business/logistics/shipping-panama-red-sea-suez-canal-edc91172>(검색일: 2024.3.12.)



3개월 내 행사계획

국제해저기구 법률 및 기술위원회 |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탐사 작업 계획 이행에 대한 정기 검토, 탐사 작업 계획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시행 현황 및 훈련 기회 할당, 심해저 활동에 대한 표준 및 지침 개발, 2023-2028년 당사국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검토, 환경 관리 계획 등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제29차 회의 | 2024년 3월 18일 ~ 3월 29일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법률 및 기술 위원회의 공석 선출, 승인된 탐사 작업 계획의 이행에 대한 정기 검토, 탐사 작업 계획 신청 검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해저기구(ISA) 간 양해각서, 예산안 검토 등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 2024년 4월 8일 ~ 4월 9일 /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 주요 내용 니카라과의 독일 상대 '대량 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독일의 의무 위반 혐의 구두심의(니카라과 구두변론 4월 8일, 독일 구두변론 4월 9일)

대한국제법학회 | 2024년 3월 30일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 / 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
- 주요 내용 신진학자 학술대회 '뉴노멀(New Normal)'